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설명회 개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녹색성장산업 등 도민 제안 직능·사회단체 등 의견수렴 통한 기본계획 마련

전북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전북 탄소중립지원센터 장남정 센터장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김택천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주제로 에너지 전환·산업, 농축산, 정책기반 등 탄소중립 분야별 관계 전문가의 토의와 도민 질의응답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라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함께하는 탄소중립 전환,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도라는 비전으로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국가와 전북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과 연차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전북도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녹색성장산업 등에 대해 6일부터 18일까지 도민설명회 및 공청회, 인터넷 전북소통대로 의견수렴, 직능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하여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민 대상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내년 1월경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행정 뿐만 아니라 도민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전북도는 도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4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등 도내 고령자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고령운전자·보행자 교통안전 공동 대응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협약 체결

전북자경위·유관기관, 통안전 교육 활성화 기대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4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등 도내 고령자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고령운전자·보행자 교통안전 공동 대응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 기용걸 도로교통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고령운전자와 고령보행자에 대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인식능력검사 포함)

을 상호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안전 관련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모집 및 교육 요청,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전북경찰청, 인산지방국토관리청, 순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도내 4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해 홈페이지, 방송사, 전광판 등을 통해 고령자 사고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 중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변회, 12년째 하위법관 명단 비공개...반쪽짜리 평가 전략

법관평가 구체적 사례 형식적

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 평가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전북변호사회관에서 2023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변회는 예상대로 하위법관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수법관 5명과 최우수법관 1명을 추가로 선정하며 '좋은 것은 퍼주고 좋지 않은 것은 공개하지 않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다. '판사들 눈치보기' 평가로 전략한 셈.

전북변회의 이번 법관평가에서 총 5명의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올해 종합 평정 71.53점으로 지난해 67.57점보다 5.86점 높았다.

변회가 공개한 하위법관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공개라는 비판이다.

변회가 공개한 사례는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한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임에도 예단을 드러낸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한 △합리적인 이유·설명 없이 증거신청을 기각해 입증기회를 박탈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 △신청사건의 심문이 종결된 후 결정을 지나치게 늦게 함 △종결된 사건을 자주 재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과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심병연 위원장이 4일 전주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2023 법관평가결과 발표식'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개함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판결이 설득력이 없음 등 9개다.

모두 매년 반복되는 이유이거나 구체적인 상황 없이 '구체적' 사례라고 표현한 것. 여기에 변호사들의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주입된 사례가 발표되면서 '눈치보기', '형식적', '반쪽 법관 평가'라는 비판에 기름을 쏟았다.

12년째 진행되는 법관평가가 무색한 사건이다.

법관평가는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

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12년간 진행됐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과는 다르게 하위법관 명단은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평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변회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는 없다는 점을 강조, 향후 '자신들 이익을 위한 법관평가'라는 비판을 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가끔 공개된 재판에서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언론보도가 될 때도 익명으로 나오지 않나"면서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올해 평가는 하위법관 평균 점수가 5.86점 높아지는 등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

/뉴스

도, 내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금연구역 확대

전북도가 내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간접흡연 우려가 많았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넓혀져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내년 8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계도기간이 이후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전북도는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및 시·군 교차 합동 지

도·점검 등을 내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개정안이 11월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및 수소소연료공급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오는 14일부터 시행

전북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기존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외 신고되지 않은 야생동물 카페나 야생동물 판매 등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반려동물과 가축, 조류 중 앵무목·경과·되새과·납부리새과,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 운영자는 13일까지 전북도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야생동물 10종 또는 50개체 미만)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관람객이 올라타기·만지기·먹이 주기 행위는 금지된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홍보물 및 야생동물 전시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경식 전북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전시금지 홍보를 위해 그간 도내 동물원 외 동물전시·체험시설에 공문과 홍보물을 송부했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린 바 있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므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